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전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98
----------	------

발의년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전경원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송영현 의원

윤기배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정천락 의원

1. 제안 이유

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및 신청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된 소송비용 회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무관련사건”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및 신청) ①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무원이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 서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사건
2.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
3.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매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관련사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사 수임료 지원(요청 금액 :)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개요			
구비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변호사 수임료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5조의 지원 비용 회수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관 계 법 령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라. (생략)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 차. (생략)

5. ~ 6. (생략)

③ ~ ⑤ (생략)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

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man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